

자율주행 사고 책임은... 법·제도적 장치 마련 동시 추진

로봇차량 사망 사고 시 책임 소재 불분명 실증 사고 대비 300억원 보상 체계 마련 전문가 협업해 도로 다양한 교통사고 분석

“자율주행 차량에 치인 보행자가 사망했을 경우 처벌 대상은? 숲을 마신 뒤 자율주행 차량에 탑승해 집까지 가면 음주 운전 처벌 받을까?”

광주에서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인 자율주행(로봇차량)이 실증된다. 동시에 운전자 없는 로봇차량으로 인한 사고 등을 대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도 광주실증이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국토교통부가 복잡한 도심 곳곳에서 운전자 개입 없이 인공지능(AI) 시스템만으로 주행하는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 실증 사고에 대비해 최근 삼성화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삼성화재는 자율주행 사고당 100억원, 연간 총 300억원 수준의 보상한도를 제공하고 사고기록장치(EDR) 데이터 분석과 사고 예방 컨설팅, IT 보안 컨설팅 등 자율주행 기업을 위한 특화 서비스도 지원한다.

광주는 본격 실증에 앞서 택시·버스 종사자, 경찰, 교수, 변호사, 보험업계 관계자, 공무원 등 교통과 관련된 전문가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다양한 사고 데이터를 확보해 실증단에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인공지능이 운전을 대신하는 시대에 대비해 안전성과 사고 책임에 대한 법적 기준, 교통체계 등 제도적 장치 마련에 집중한다.

운전자가 보조도구인 차량을 직접 조작하고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현재의 교통과 관련된 법과 별개로 가장 ‘자율주행자동차법’을 만들기 위해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 현재의 교통법규를 자율주행에 적용할 경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불명확 하다고 경찰 등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숲을 마신 회원이 평소 습관처럼 자율주행 차량의 운전석에 탑승해 집으로 돌아가던 중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면 처벌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도로 횡단보도 갓길에 주차된 차량 사이로 갑자기 튀어나온 보행자를 자율주행 차량이 발견하지 못하고 친 뒤 숨졌을 경우 책임 주체를 가릴 수 없다.

기존 법규정은 운전자가 책임의 대상이



지만 자율주행은 인공지능이 운전의 주체여서 복잡해진다.

차량 제조사와 자율주행 차량을 학습시킨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도로 환경을 분석해 로봇차량에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통제센터 등이 책임 소재를 놓고 다툰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시와 국토부는 도심에서 자율주행 실증을 하던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삼성화재와 보험계약 체결로 기본적인 보상 장치를 마련했다.

또 인공지능 차량을 총괄하는 플랫폼과 제조사 간 책임 분담 체계 등이 담긴 법규정을 만들기 위해 자율주행 실증을 하고 있는 미국·중국 등의 운영 사례를 분석하고 있다.

손두영 인공지능산업실장은 “자율주행

은 운전자 개입 없이 인공지능 시스템이 도로상에서 발생하는 수천가지 변수를 고려해 스스로 판단한다”며 “광주 도심에서 진행되는 자율주행 실증은 안전이 최우선이고 이에 따른 보상체계도 동시에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증을 통해 관련한 법·제도가 마련되면 기업들도 광주를 주목하고 미래차 모빌리티 상용화에 속도를 낼 수 있다”며 “자율주행 차량을 제작한 기업이 광주에서 인공지능 데이터를 학습 하고 실증까지 하는 계획이 한층 활발해 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광주를 미래차 모빌리티 자율주행 실증도시로 지정하고 5월 시범 운행, 9월께 로봇차량 200대를 도심에 투입해 실증을 추진하고 있다. /뉴스



한빛원자력본부 ‘체험형 산업안전교육장’ 안전보건공단 ‘민간 안전체험교육장’ 공식 인정

한빛원자력본부(본부장 김성민) ‘체험형 산업안전교육장’이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공식 ‘민간 안전체험교육장’으로 인정받았다.

민간 안전체험교육장 인정은 교육 프로그램, 전문 강사 인력, 시설 및 장비 현황 등 안전보건공단의 엄격한 심사 기준을 통과하면 획득할 수 있는 제도다.

한빛본부는 3월 19일(목) 인정서 수여식을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성민 본부장은 “교육 역량과 시설의 우수성을 공인받은 만큼, 더욱 내실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인정을 통해 한빛본부는 본부

및 협력사 임직원은 물론, 지역사회와의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지역 안전 문화 확산의 거점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한편, 한빛본부는 매주 금요일을 ‘체험형 산업안전교육장’ 지역사회 개방의 날’로 지정하여 일반인(단체)에게도 수준 높은 안전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빛본부 체험형 산업안전교육장에서 체험 교육을 이수할 경우 법정 정기 안전교육 시간이 두 배로 인정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산업안전교육장 이용 및 교육 신청 관련 내용은 한빛원자력본부 HSE부 (☎061-357-3404)를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영광/이현식 기자

광양경자청, 제2차 발전계획 수립 본격 착수

전남도, 경남도 등 유관기관이 모여 착수보고회 개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구중근, 이하 광양경자청)은 3월 23일 상황실에서 ‘제2차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GFEZ)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용역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산업부의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을 토대로 광양만권의 특성에 맞는 중장기 발전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용역 기간은 이달부

터 올해 12월 중순까지 약 10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보고회에는 광양경자청 임직원 외 전남도와 경남도, 여수·순천·광양시, 하동군 등 광양만권에 인접한 지자체 공무원들과 용역 수행기관인 와이비파트너스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하여 광양경자청 발전계획 수립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번 제2차 발전계획에는 광양만



권의 향후 10년에 대한 발전비전을 제시하고 목표설정, 핵심전략산업 중심의 혁신

생태계 조성 전략 등이 담길 예정이다. 광양/신선호 기자

광주상공회의소(회장 한상원)가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 기업 확산을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광주상의는 최근 지역 유관기관 관계자와 노무 전문가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라벨+4.5 프로젝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광주상의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지역 기업의 ‘위라벨+4.5 프로젝트’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위라벨+4.5 자문·상담 지원사업’의 본격 추진을 앞두고 사업 추진 방향과 운영 계획을 공유했다. 또 기업

광주상의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 기업’ 확산 앞장

참여 확대와 지원 체계 구축,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 방안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위라벨+4.5 프로젝트’는 실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과 생활의 균형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노사 합의를 통해 임금 삭감 없이 주 4.5일제 도입 등 근로시간을 줄이는 기업을 지원하

는 것이 핵심이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종업원 수 20인 이상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며, 지원금은 근로시간 단축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근로시간을 2시간 미만으로 단축하는 부분 도입 기업에는 근로자 1인당 월 20만~30만 원이, 2시간 이상 단축하는 전면 도입 기업에는 근로자 1인당 월 40만~50만

원이 각각 지원된다. 또 생명·안전 관련 업종, 장시간 노동 사업장, 교대제 개편 기업 등에는 월 10만 원의 추가 지원이 제공되며, 신규 채용이 이뤄질 경우 월 60만~80만 원의 별도 지원도 가능하다.

광주상의는 참여 기업 확대와 문화 조성을 위해 ▲인식 확산 캠페인 ▲참여 희망 기업 대상 자문·상담 ▲우수 사례 발굴 ▲지역 거버넌스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재일 기자

전남농업기술원, 청년농업인 맞춤형 지원에 80억원

시설·자금 지원 넘어 영농 단계별 자립 역량 강화 중점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행란)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고 미래 농업을 이끌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올해 총 80억 원을 투입, ‘청년농업인 맞춤형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사업은 단순 시설·자금 지원을 넘어 청년농업인의 영농 단계별 자립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아이디어 발굴부터 영농 실습, 독립 경영, 지역사회 기여로 이어지는 체계적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실질적 성장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먼저 18억 원을 투입해 ‘청년농업인 스타트업 및 스케일업 지원사업’을 고도화한다. 창농 교육부터 투자 유치까지 연계하는 맞춤형 성장 지원 체계를 통해 유망 기술·경영 컨설팅을 제공해 초기 창업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청년농업인의 가공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청년창업농타운 회원은 제품지원센터가 보유한 109종의 가

공 장비를 활용해 시제품을 개발할 수 있다. 또한 식품가공 상품화 실무 교육(10과정·70시간)을 운영해 소스류 및 분말화 공정 등 배합부터 포장까지 현장에 즉시 적용가능한 공정형 기술을 교육한다.

영농 기술과 자본이 부족한 청년의 안정적 자립을 위해 총 62억 원을 투입해 스마트팜 실습과 생산 기반도 강화한다. 임대형 스마트팜 14개소를 신규 조성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온실을 임대하고, 기존 경영실습 임대농장에는 2억 1천만 원을 투입해 환경제어시스템 등 시설을 보완한다.

전남 12개소에 내재해형 온실 신축을 지원하는 ‘스마트팜 자립기반 구축 사업’을 추진해 청년농업인의 독립 경영을 뒷받침한다. 이와 함께 3개소에는 첨단 농기계를 활용한 ‘청년 스마트 영농단’을 육성해 취약계층 농작업 대행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농촌 공동체 문화 확산에도 힘을 예정이다.

/신종필 기자



자연속의 가족미를 곡성에서